

“국민 명령은 오염수 확인 아닌 검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서울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직격... '일이 보여주는 것만 확인은 무의미'
G7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IAEA 독립적인 검증 지지"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에 대한 맹폭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으로 떠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검증하지 못하는 사실상 '견학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확인'이 아니라 '검증'이라며 "일본 측이 보여주는 대로 확인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명령은 확인이 아니라 검증으로, 이번 시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견학단", "관공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한 것

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이후 서울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7개 지방 의회에서 규탄 성명 발표를, 서울 성동구와 강서구 등 24곳에서 오염수 방류 철폐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각각 진행했다며 "해양 방류 철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향후 IAEA의 검증 결과도 주목된다. G7은 이날 정상회의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롬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롬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포함

정개특위, 25일 본회의의 처리 방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앞서 국민의 힘 최형두·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후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출국

21명 5박6일...제1원전 찾아 실태 확인·질의응답 등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끄는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일본 방문 일정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이지만,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진다. 22일에는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찰단은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의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시찰단은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

핵중제거설비(ALPS), 해양 방출 설비 설치 상태, 화학분석 등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오염수의 농도 분석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유 단장은 이번 시찰단 구성과 관련, "방사선 분야, 원전 각 설비 부문별로 10년, 20년 이상 현장에서 안전 규제를 해오신 분들이다.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안전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해온 분들"이라며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실무진으로(시찰단을 구성한 만큼)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철저히 준비한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혁신기구 ‘외부인사 위원장’ 구인난

‘돈봉투·코인’ 잇단 논란에 위기감...마땅한 후보군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따른 의혹과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 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혁신기구 위원장으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 비등하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계 사이 계파 갈등이 재차 불거진 탓이다. 어느 계파와도 가깝지 않고 당내 이해관계에서 무관한 인물이 혁신 전권을 틀어쥐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 영입은 '필수 조건'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 관계자는 21일 "당내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전반이 첨예하게 갈릴 것이고, 국민 눈에도 좋게 보일 리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신속하게 선임해야 당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비슷한 비율로 꾸리는 등 인선에 속도가 붙어 혁신기구를 조속히 떠올 수 있다는 게 이 관

계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16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끈 혁신위원회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로 치른 4·29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당은 대표 사퇴 대신 김 전 교육감에게 혁신위원회를 맡겨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혁신위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를 구성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 정당·공천 혁신 방안을 내놨고, 이는 총선 승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김 전 교육감 같은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혁신 이미지에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도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혁신기구를 띄우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후보군조차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당이 확실하게 변화하려면 결국은 외부 인사가 혁신기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방면으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